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16-03호 2016년 9월 2일

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거시정책 방향

2016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거시정책 방향>

2. 일 시 : 2016. 7. 28(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국가신식중심 판젠핑(范劍平) 수석이코노미스트

1. 중국경제에 나타난 문제점

❑ [과잉유동성] 현재 중국경제는 과잉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실기업,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물경제의 투자수익률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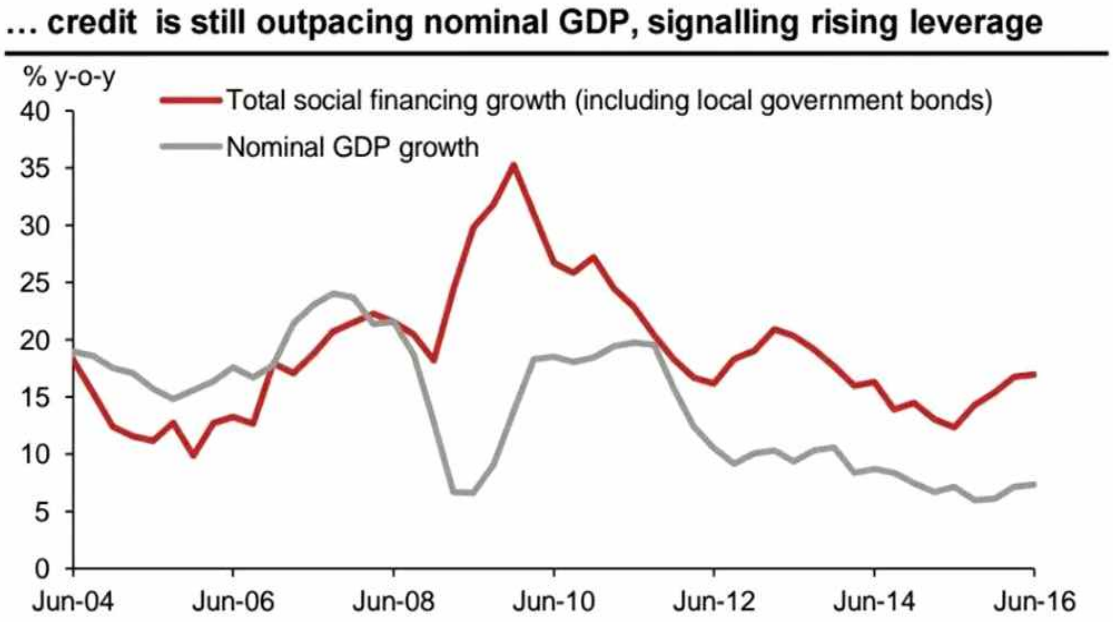
- 2014년, 2015년, 2016년 M2는 각각 12.2%, 13.3%, 11.8% 증가했으나, 증가된 통화가 실물경제에 유입되지 않음.
  - ◦ 증가된 통화 중 일부분이 과잉생산 기업과 좀비기업, 지방의 부실기업 및 금융플랫폼으로 흡수됨.
  - ◦ 2014-2015년 상반기 잇따라 주식시장이 폭등했고, 201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또한 폭등하는 현상을 초래함.

◦ 또한, 증가된 통화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CPI, PPI로 대표되는 수요부문에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음.

◦ 2016년 6월 말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하여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협의통화(M1)는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경제는 이미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둔화하는 등 유동성 함정에 빠질 기미를 보임.

그림1. 2009년 이후 중국 총사회융자 증가율 > 명목GDP 성장률



– 또한 2016년 6월말 금융기구의 위안화 대출 잔액은 101.4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 위안화 부동산 대출 잔액은 23.9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

– 한편 중국의 금융업 규모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2008년에 일본, 2013년에 미국을 초과하면서, 2015년 기준 금융업 비중이 8.5%를 기록함.

◦ 국내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부문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리스크가 증대됨.

❑ [기술부족] 경제위기 이후 자금이 과학기술 혁신 분야보다 금융과 부동산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이 발생하지 않음.

– 양적완화정책의 시행으로 증가된 대량의 유동성이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함.

– 기업의 R&D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혁신구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 즉,

지난 11.5규획과 12.5규획 기간 동안 R&D지출의 ＧＤＰ 비중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R&D 지출의 ＧＤＰ비중: 2010년 1.75%(목표 2%), 2015년 2.1%(목표 2.2%)

◦ 13.5규획 기간 동안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2006-2020)'에서 설정한 R&D지출 목표인 2 .5%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지난 10년간 중국의 R&D 투입이 적었던 주요 원인은 발행된 대량의 통화가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부문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임.

❑ [인구고령화] 중국의 노동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함.

– 1990년대 출생한 인구가 1980년대 출생한 인구에 비해 23.2% 감소 , 2000년대 출생한 인구가 1980년대 출생한 인구보다 35.4% 감소함.

– 2015년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1.47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47%를 차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여자의 경우 55세, 남자의 경우 60세에 직장을 퇴직할 경우, 2020~2030년 사이 노동인구는 연평균 약 700~8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16-59세 노동인구가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후 노동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1년 74.5%에서 2015년 66.3%로 하락함.

◦ 한편, 과거 농민공 증가율이 5%에서 최근 1%대로 하락하면서 도시 노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그림2. 제6차 인구조사 결과(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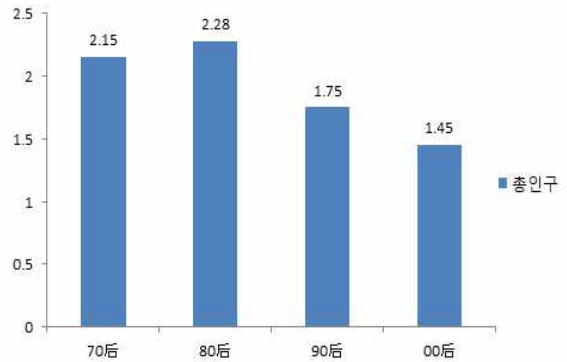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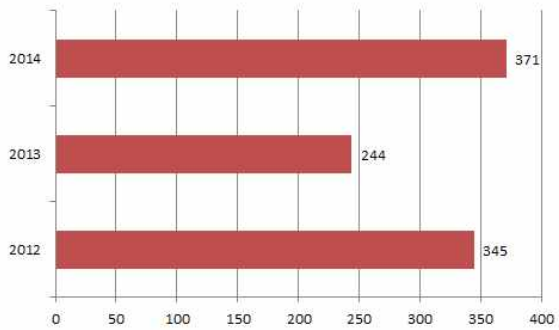


그림3. 노동인구의 감소(만 명)



2. 중국경제 전망

❑ [GDP 성장률] 2016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전년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두 자릿수 성장률(10.6%)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에는 6.6%~6.7%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GDP와 도농주민의 1인당 소득 수준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대의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함.
  - GDP가 2배 증가하려면 2016년~202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최소 6.5% 이상 유지해야 함.
  - 경제둔화 압박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L형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4. 2011~2015년 중국 GDP 및 성장속도(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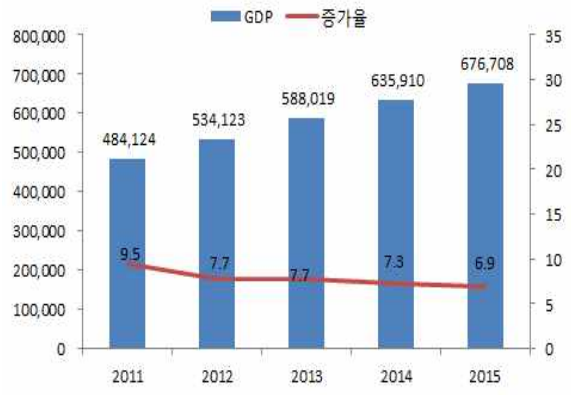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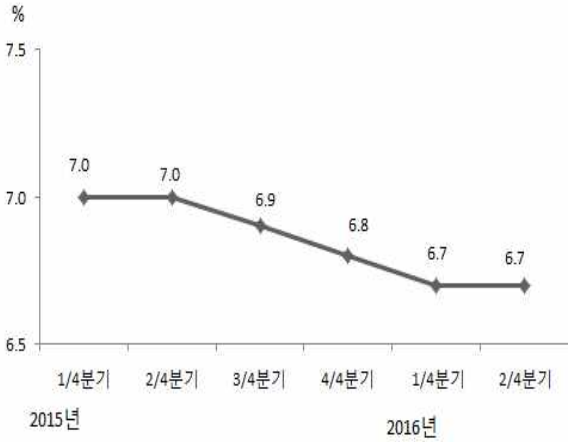


그림5. GDP 성장속도(분기별 전년대비)



- 13.5규획(2016~2020년)동안 중국의 연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은 6~7%로 예상됨.
  - 주요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대내외 요인(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무역의 지속적 둔화, 중국의 투자와 소비수요가 부진 등요인)을 감안하여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7%로 예측함.
  - 현재 중국경제는 경제구조, 기술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는 경제성장 여지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또한 중국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율, 대내외적 리스크 상승 등도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환경]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수익률 역시 최저치를 기록함.

– 2016년 1~6월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제조업투자는 5월 1.3%에서 6월 −0.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6월 신규 착공 프로젝트의 총투자액 증가속도는 5월 19.1%에서 8.4%로 급격히 하락함.

◦ 6월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3.6%로 나타나 4월(9.7%)과 5월(6.6%)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부동산 신규 개발면적 증가율도 3.6%로 나타나 5월(10.6%)에 비해 급격히 하락함.

– 한편 정부주도 인프라건설 분야 투자는 증가된 반면, 민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6년 인프라건설 투자의 증가속도는 5월 19.8%에서 6월 21.7%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점유율 역시 상승, 이는 6월 재정지출의 현저한 상승세와 일치한 양상을 보임.

◦ 6월에 재정정책 완화가 확대되고 지방채무 스왑이 가속화되면서 인프라건설 투자가 반등하였지만, 기타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실정임.

◦ 반면 민간투자의 경우 동기간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6. 고정자산투자(농가 불포함) 전년대비 증가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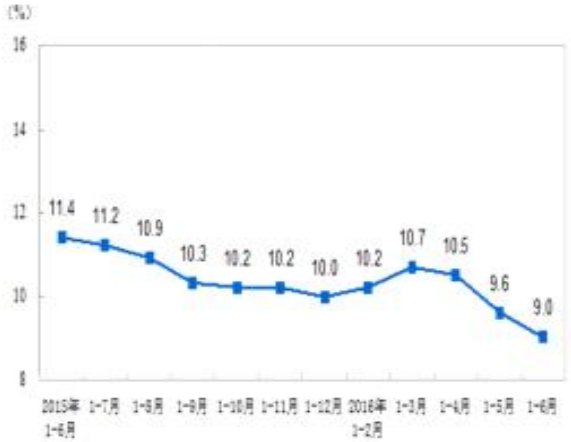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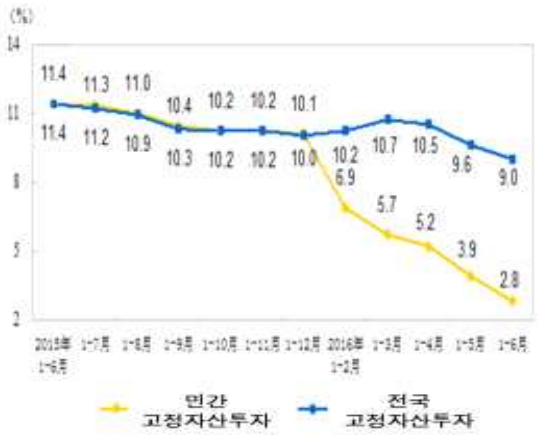


그림7. 민간 고정자산투자와 전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



– [투자수익률 하락] 중국경제의 난제는 성장속도 하락이 아닌 투자수익률 하락임.

◦ 중국의 투자수익률은(ROI) 1993년 15.6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0년~2008년 8~10%대의 수익률을 유지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14년에는 2.7%으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함.

◦ 1979년~2007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연평균 3.72%증가하였지만, 2008년~2014년 2.21%까지 하락함.

– 2016년은 13.5규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인프라건설 분야의 투자가 증가될 예정임.

◦ 8,000억 위안 이상의 철도건설 투자, 1조 6,500만 위안의 도로건설 투자, 20건의 중대 수리공사 착공, 수력발

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특고압 송전, 스마트 그리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의 역할 발휘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관련분야의 예산을 확대할 예정임.
  - 중앙예산내의 투자예산 규모를 5,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투자/융자 자본제도 개혁을 심화할 것임.
  - 시장화 방식을 통해 전문 건설기금을 확보하고, 지방의 융자 플랫폼을 시장화 융자로 전환시키며 인프라시설 등 자산증권화를 모색함.

❑ [대외환경] 해외수요 부진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위안화 환율이 소폭 절하될 것으로 예측됨.

- 전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012년에 급속 하락함.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였고 미국과 유럽의 수입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 한편, 영국의 EU탈퇴로 중국경제에 수출증가율 및 GDP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영 무역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수준이며, 2015년 기준 영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10.8억 달러로 0.8%에 불과함.
  - 하지만 영국의 EU탈퇴가 영국, 유럽,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EU의 GDP성장률이 1%p둔화 될 경우 중국의 대EU수출증가율은 5~6%p 감소, 중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p 감소, GDP 성장률은 0.2%p 둔과가 예상됨.

※ (위험)시나리오: EU GDP성장률 2%p둔화→ 중국의 총수출증가율 2%p 하락, GDP 성장률 둔화 0.4%p

- 향후 일정 기간 위안화 환율은 소폭 절하할 것으로 예측됨.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총괄하여 볼 때 향후 일정 기간 위안화는 소폭 절하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폭으로 절상하거나 절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거시정책방향

❑ [공급측개혁]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현재 및 향후 중국경제의 핵심 경제기조로 설정함.

-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공급측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개혁임.
- 중국경제는 핵심 분야의 주요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주로 기존 메커니즘을 재정비 하고, 공급측개혁을 통해 공급시스템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시장과 사회창조력을 활성화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조정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주요 동력이며, 생산과잉 해소와 디레버리

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하지만 단기적으로 생산과잉을 해소할 경우 일부 지방의 GDP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레버리징은 리스크를 더 확대시킬 수 있음.
  - 그렇다고 생산과잉과 레버리지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 효과도 점차 약화되면서 '좀비기업'이 더 증가하고, 채무도 점점 증가하면서 재정금융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

❑ [정부기능의 전환 추진]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 리스트 공개, 지역별 시장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범 시행함.

- 행정업무 관련 비용, 정부 정가(고시가격), 경영 서비스 비용, 정부기금, 국가직무자격 등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시행함.
- 가격개혁을 심화하고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발전에 저해되는 행정법규 및 규범적 문서를 수정하거나 폐지함.
- '인터넷플러스+정무서비스'의 추진을 통해 각 부문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민과 기업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전 사회의 창업 및 혁신 잠재력 발현] 첨단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강화함.

- 첨단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R&D비용 합산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첨단과학기술 기업과 인큐베이터 업체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과 업계 선두기업의 선진적인 R&D기구 건설을 지원함.
- 국가자주혁신 시범지역 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가자주혁신 시범구와 테크노파크를 건설함.
- 향후 △대중 창업과 만인혁신 시범기지 건설 △창업서비스업 육성 △엔젤투자 △공유경제 발전 등을 지원함.

❑ [국유기업 개혁] 기존의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국유자본과 집체자본, 비공유자산 등에 효율적인 융합을 추진하여 혼합소유경제를 통한 개혁을 추진함.

-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통합관리, 시장 퇴출 등 방법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의 이사회 직권, 시장을 통한 경영자 초빙, 전문경영인제도, 혼합소유제, 직원 주식소유제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함.
  -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비국유자본의 주식보유 형식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 혼합소유제 기업을 확대함.
- 기업의 고용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고급인재 및 기업경영 관리자의 선발방식과 임금보수 제도를 시장 추세에 맞게 구축함.
- 또한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회사의 개편, 자본관리 위주로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구의 기능 전환, 국유자산 유실을 방지를 추진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증 및 증가를 확보함.

❑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금리시장의 개혁을 가속화함.

- 통화정책의 '안정성'은 바로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총량을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위해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 '유연'하다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이 실제 추진과정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다는 것으로 경제의 펀드멘털 변화를 수시로 살피면서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시기 맞춤형 조정을 통해 사전조정과 미세조정을 강화한다는 것임.
-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총사회융자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함.
  - 2016년 광의화폐(M2) 증가율은 13% 내외, 총사회융자(社会融资规模余额) 증가율은 13%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개시장조작, 금리, 지준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함.
  -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과 자산채무관리 강화, 자산채무 총량과 만기 구조의 합리적 배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수준을 향상시킴.
- 금리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함.
  - 금융기구의 독립적 가격결정(定价)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의 수요공급 관계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며 금리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완비함.
  - 이와 동시에 중앙은행의 금리조정 메커니즘의 완비를 가속화하고 금리전달 루트를 구축함.

❑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은 여전히 제약적이므로,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중국의 무역흑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환율은 바스켓통화에 따라 변동될 것임.
- 기존에 추진된 환율개혁은 시장예측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시장에 의한 환율형성을 강화하여,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추진해야 함.

❑ 공급측개혁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소진, 디레버리징, 기업비용절감, 유효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과잉생산 해소] 생산과잉업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관련 제도의 정비와 집행강화를 통해 좀비기업 처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

- 2016년 6월 철강재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1억 72만 톤으로 역사상 한 달 생산량이 최초로 1억 톤을 돌파함.
  - 향후 5년간 철강분야에서 1~1.5억 톤의 생산량을 감량하고, 석탄은 5억 톤 감량 할 예정임.
-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구체적 업무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환경규제(에너지 소모, 질량, 표준,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과잉생산 업종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관련 제도 정비와 집행 강화를 통해 좀

비기업 처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

❑ [부동산 재고 소진] 호적제도 개혁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부동산 재고를 소진함.

- 호적제도 개혁을 강화하여 도시 상주인구의 시민화 메커니즘의 건전화를 통해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도시유입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추진함으로써 도시화율을 제고함.
- 각 도시 실정에 맞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한 농민공 및 가족을 도시민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도시 시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 부여함.
  - 도시에서 직업을 가지고 5년 이상 거주 했거나 가족이 함께 도시로 이전한 농민공을 대상으로 호적문제와 (도시유입 농촌인구)자녀의 진학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함.
- 거주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현재 미등록 상태로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유입 농촌인구의 도시 시민화 메커니즘 건전화함.
  - 거주증 소유자의 의무교육, 공공취업 및 공공위생서비스 등 국가가 규정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향후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해 도시 시민과의 차이를 축소함.
  -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토지도급권, 주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을 보호해 주고, 농민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기 권리를 유상 양도하도록 지원/유도함.
  - 농민공의 도시호적 전환의 의미는 공급측면으로 볼 때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공급과 노동비용을 안정시키고 현대 공업의 노동자를 육성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수요측면으로 볼 때 소비수요 확대,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시 인프라시설과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향후 중국의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재고, 장기적으로 인구에 의해 발전 방향이 결정될 것임.
  - 미래 잠재수요를 대표하는 상주인구와 호적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 2선 도시 모두 인구유입형으로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보다 훨씬 많지만, 3, 4선 도시는 상주인구보다 호적인구가 적고 인구의 유출이 높은 나타남.

❑ [디레버리징] 최근 중국의 레버리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부문의 레버리지율이 높음.

- 2015년 말 기준 전체 레버리지율(당해 명목 GDP 대비 비금융부문의 채무총액 비중)은 248.6%로 특히 기업부문의 레버리지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
  -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실물경제부문(금융 불포함)의 총레버리지율은 248.6%에 달하였는데 그 중 가계부문, 정부부문, 비금융부문의 레버리지율은 각각 38.8%, 43.5%, 166.3%로 나타남.
  - 중국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율은 166.3%로 이미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였으며(미국은 70.9%), 기업의 과중한 채무는 금융위기 혹은 경제성장의 장기적 둔화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정부, 미국은 가계, 중국은 기업부문의 레버리지율이 높은 편임.
-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율은 경제 리스크를 초래하여, 향후 △ 시스템적인 금융위기 유발, △ 마이너스 경제성장, △ 나아가서 국민저축을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비금융부문) 대출현황 대비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대출총액	금액(10억 달러)	26,075	44,160	6,270	7,083	7,380	15,975	4,231
	GDP 대비 비중(%)	248.6	248	186.8	291.3	262.6	387	285.8
기업	금액(10억 달러)	17,442	12,628	1,824	3,027	1,966	4,201	1,650
	GDP 대비 비중(%)	166.3	70.9	54.3	124.5	70	101.8	111.5
정부	금액(10억 달러)	4,559	16,734	2,411	2,356	2,486	8,725	1,052
	GDP 대비 비중(%)	43.5	94	71.8	96.9	88.4	211.4	71.1
국민	금액(10억 달러)	4,073	14,079	1,807	1,373	2,429	2,715	1,421
	GDP 대비 비중(%)	38.8	79.1	53.8	56.5	86.4	65.8	96
채무상환비율		--	38.4	19.8	49.4	30.4	36.2	53.4
자산채무율(%)		49	54.78					

주: 채무상환비율은 debt service ratio(DSR), 상기 채무는 은행대출, 기타 금융부문의 대출, 채권 등을 포함

자료출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OECD, Trading economic, 2015년 3분기 기준

- 레버리지비율 감소를 위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법치화 건설, 건전한 시장 발전 등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 주식, 채권시장에 대한 개혁과 법치화 건설 추진,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통해 직접융자의 비중을 향상시킴.
  - ◦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지, 시장메커니즘의 조정역할 수행, 기초적인 제도건설과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융자제도 완비, 효과적인 시장 감독관리 확보 등 투자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는 주식시장의 형성을 가속화함.
  - ◦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직접융자의 비중을 향상시키며 레버리지율을 감소하고 주식발행 등록제를 실시할 여건을 마련함.

❑ [기업비용 절감]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R&D 비용의 합산공제를 시행하고, 노동자의 인적자본수준 향상, 저임금 고기술자의 비교우위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함.

- 과학기술 혁신 강화를 위해 R&D비용에 대한 합산공제 정책을 실시함.

◦ 2016년 1월 1일부터 합산공제 정책을 시행하여, R&D 활동과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요청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시험 생산제품의 검사비, 전문가 자문비용, 연구개발 협력 혹은 위탁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킴.

◦ 3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R&D비용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합산공제에 대해 사후 등록 관리를 실시함.

– 인적자본수준 향상, 기술혁신,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의 함양을 제고함.

◦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보완함.

◦ 중국의 1인당 평균 교육수준은 빠르게 제고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 수준은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저렴한 임금 수준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비교우위를 향상함.

◦ 지멘스 이사회의 2004년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Huawei) 제품의 저원가 우위는 주로 저렴한 R&D 비용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음.

◦ 즉, 유럽의 동일분야 R&D 전문 인력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약 12만~15만 달러로 화웨이의 6배임.(중국 화웨이 R&D 인력의 1인당 임금은 연평균 2.5만 달러에 불과)

◦ 또한, 중국 화웨이 R&D인력의 연평균 근무시간도 약 2,750시간으로 유럽(1,300~1,400시간)의 2배 수준임.

❑ [유효공급 확대] △제품의 품질 개선 △제조업의 고도화 촉진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유효공급을 확대함.

– 소비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의 품질안전표준을 적용하며 제품의 질에 대해 징벌적 보상 제도를 실시함.

◦ 기업의 소비자 맞춤형 주문제작과 정밀성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을 육성하며, △품목 다양화 △품질 향상 △브랜드 구축을 추진함.

– '중국제조+인터넷'추진, 국가급 제조업 혁신 플랫폼 건설, 스마트 제조 시범프로젝트 실시, 녹색제조, 첨단장비 제조 등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함.

– 새로운 국가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서비스업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디지털 창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특히 생산형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생활형 서비스업의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네트워크 도시를 건설하여 5만개 행정촌에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시켜 더 많은 도농주민이 디지털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속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농촌의 빈곤인구를 감소함.

◦ 농촌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20만km에 달하는 농촌 내 도로를 신축/개조하며, 지방도시와 농촌 간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건설함.

◦ 농촌의 전력망 개조를 추진하고, 향후 2년 내 농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우물펌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를 공급함.

◦ 2016년에 1,000만 명 이상 농촌 빈곤인구의 감소 계획 실현하고, 빈곤퇴치에 대한 중앙재정 자금을 43.3% 증가함.

<질의·응답>

질문 1.

현재 중국의 통화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셨는데 중국 경제에 적절한 통화 공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CPI 상승률 및 기타 요인을 모두 감안해서 통화 공급량을 확정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약 1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 결정할 때 실제 GDP 성장률과 CPI 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함. 과거 중국은 통화 공급량결정시 개혁의 수요를 감안하여 2% 내외의 기타 통화측면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통화 공급량을 결정해 왔음. 예컨대 중국의 GDP 성장률이 6.5%, CPI 상승률이 1.5%로 가정할 경우 사실 적절한 통화 공급 증가량은 8% 이나 그동안 개혁의 수요를 감안하여 10%내외로 통화량을 결정해 왔음.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한지 30여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통화측면의 수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올해 중국의 통화 공급량 증가속도는 8% 내외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2016년 중국정부의 통화 목표증가량은 13%인데 이는 여전히 중국정부가 목표 성장률보다 높은 통화증가율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른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통화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며, 그래야만 초과 발행한 통화를 소화해낼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은 목표 통화증가율을 목표 성장률보다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통화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6.5%의 경제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됨.

질문 2.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 소폭의 절상/절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폭의 절상/절하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폭 절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 즉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기준으로 연간 어느 정도를 소폭 절하로 생각하는가?

답변 2.

현재 중국의 위안화는 미 달러가 아닌 복수바스켓통화에 연동하여 환율이 결정되고 있음. 물론 바스켓통화에서 홍콩달러 포함해서 미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미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는 하지만, 미 달러 외에 엔화, 유로화, 싱가포르 달러 등 기타 13개 바스켓통화의 영향을 받기도 함. 과거 미 달러 연계환율제도를 실시했을 때는 엔화, 유로화가 대폭 절하했을 경우 미 달러 대비 위안화는 오히려 소폭 절하하여 엔화나 유로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대폭 절상할 가능성도 있었음. 하지만 지금은 바스켓통화 연계환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나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하면 위안화도 큰 폭으로 절하할 가능성이 큼. 즉 엔화와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절하/절상 폭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미 달러 대비 위안화의 절하 폭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만약 미 달러 대비 엔화나 유로화의 절상/절하 폭이 클 경우 위안화의 절상/절하 폭도 클 것임.

질문 3.

향후 중국은 새로운 환율 제도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에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요인도 포함된 것인가? 현재 예상치 않게 수출이나 무역 측면에서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위안화가 뜻밖에 2015년 이후 자본유출의 문제로 자꾸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외부에서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채무와 관련해서 좀비기업 처리, 은행에서 채무를 출자나 채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중국 은행에서 채무를 출자나 채권으로 처리한 적이 없는데 추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는가?

답변 3.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은 미국의 금리인상 요인을 고려하였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그 어떤 나라의 환율이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모두 세계 주요국가의 중앙은행과 충분한 교류를 가진 후에 결정하는 것임. 2015년 8월 11일에 위안화 환율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당시 세계 주요국가가 긴장된 분위기에 있었음. 2016년 1월 4일에 위안화 환율 중간가가 재차 절하하였는데 역시 주요국가의 관심을 끌었음. 하지만 이번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지난 두 차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절하하였지만 세계 주요 국가는 오히려 태연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음. 아마 첫 두 차례의 위안화 환율 절하와 관련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가의 염려를 야기하였고 이번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발생한 위안화 환율의 절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은행 사이에 충분한 교류를 가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태연하게 받아드린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바스켓통화와 연계되어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의 대폭 절하로 인한 위안화의 영향을 중국정부 역시 충분한 인식했을 것임. 향후 중국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실시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음.

사실 중국은 이전에 은행의 기업채무를 출자나 채권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음. 즉, 주룽지 전임 총리가 재임기간 중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기업채무에 대해서 은행의 출자나 채권 등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그때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때와 지금은 경제상황이 다름. 당시 경제가 V자형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L형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거시경제 배경 하에서 지난번처럼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폭등하여 기업채무에 대한 은행의 출자, 채권 처리 방식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더 많은 해외경험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 법률이 아닌 정책에 의해 기업에 대한 처리문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채무에 대한 은행의 출자나 채권 등 처리는 정책보다는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 추진할 경우 지도자 의견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임. 즉 이러한 업무를 정상적인 은행 업무에 포함시켜야 함.

질문 4.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공급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실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수요측개혁임.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일본이나, 향후 장기 불황 위험이 있을 한국의 경우 경기불황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

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공급측개혁의 일환으로 좀비기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민간 구매력 감소를 수반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생산도 줄어들게 될 것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4.

사실 현재 중국은 소비를 자극해야 함. 소비를 확대할 경우 생산과잉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중국 경제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임. 일본이나 한국의 경제를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사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음. 또한 일본과 한국에 비해 중국은 낮은 경제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달하였을 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함.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당시 1인당 GDP는 15,000달러였고, 한국은 12,700달러였음. 즉 월드뱅크 기준에 따르면 이 두 국가는 모두 이미 고소득국가에 진입한 후 고령화에 진입했음.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2000년에만 65세 인구가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에 달하였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1,000달러에 불과했음. 또한 2014년에 65세 인구의 비중이 10%에 달하였는데, 당시 1인당 GDP는 7,600달러였음. 따라서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령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것임.